

보도설명자료

('22. 7. 12.)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

(7.12일자 이데일리 「일관성 없는 에너지정책은 규제보다 무섭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음
 - 국내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려면 충분한 재생에너지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새정부 들어 뒤집힌 에너지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도 유희부지의 적극적 활용 등
실현가능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 중장기 재생에너지 목표 및 원별 적정비중 등은 연내 수립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마련할 예정임

□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❶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❷ 제3자PPA('21.6월), ❸ REC 거래시장 개설('21.8월) 등

- 국내 총 21개 RE100 가입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약 25TWh)은 금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약 44TWh)의 57% 수준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없음

□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RE100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인하를 유도하고,
- RE100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RE100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문의: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 장 (044-203-5360)

김범수 사무관 (044-203-5361)